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



## 2024 강령정책분과 구성

직 위	구 분	역 할
위원장	위 성 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강령정책분과 운영 총괄
위 원	허 종 식 국회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강령정책분과 운영
	송 재 봉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 기 현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시)	
팀 장	이 용 민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령개정 기획 및 실무 총괄
팀 원 (민주연구원)	김 은 옥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외교·안보, 통일
	정 상 희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경제 (산업 등)
	강 병 익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복지
	남 국 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일자리·노동
	류 이 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박 동 옥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자치분권·균형발전, 과학기술
	박 혁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치, 언론·미디어
	배 지 영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기후·에너지·환경
	이 경 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교육
	채 은 동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경제 (국가재정 등)
	박 상 희 정책네트워크실 부장	실무 지원
	김 예 슬 정책연구실 주임	실무 지원





## 연속토론회 추진계획

○ 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일시 : '24.7.11(木)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li><li>•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li></ul>
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허 종 식 강령정책분과위원</li></ul>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 성 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li><li>• 지 병 근 조선대 교수</li></ul>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김 성 환 국회의원</li><li>• 김 영 배 국회의원</li><li>• 이 연 희 국회의원</li></ul>

○ 2차 토론회 : 정책방향 주요 키워드 - 미래, 번영, 행복

- ※ 방점 : 現 강령 각 정책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회像, 삶의 가치와 모양새
- 일시 : '24.7.18(木)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li><li>•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li></ul>
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한 주 민주연구원장</li></ul>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박 태 응 한빛미디어 의장</li><li>• 홍 성 국 前 국회의원</li><li>• 최 유 석 한림대 교수</li></ul>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차 지 호 국회의원</li><li>• 이 강 일 국회의원</li><li>• 서 미 화 국회의원</li></ul>



## 강령정책분과 제1차 토론회 :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I 개요

#### ○ 목 적

- 2024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활동의 일환
- 당 강령 개정방향 수립을 위한 現 시대정신 및 민주당의 가치·비전 토론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II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패널 및 주요내용 (사회: 이 용 민 강령정책TF 팀장)
인사말	10:00~10:10	• 이 춘 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 위 성 곤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좌 장]		• 허 종 식 강령정책분과위원
발 제	10:10~10:50 (각 20분)	• 진 성 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지 병 근 조선대 교수
토 론	10:50~11:20 (각 10분)	• 김 성 환 국회의원 • 김 영 배 국회의원 • 이 연 희 국회의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20~11:40	공 동



## 목 차

### 발 제

1. 민주주의의 심화·확장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진 성 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1
2. 시대정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지 병 근 조선대 교수 ..... 9

### 토 론

- 김 성 환 국회의원 ..... 23
- 김 영 배 국회의원 ..... 27
- 이 연 희 국회의원 ..... 31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발제 1

# 민주주의의 심화·확장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진성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 01

## 민주주의의 심화·확장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진성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 □ 시대 인식과 상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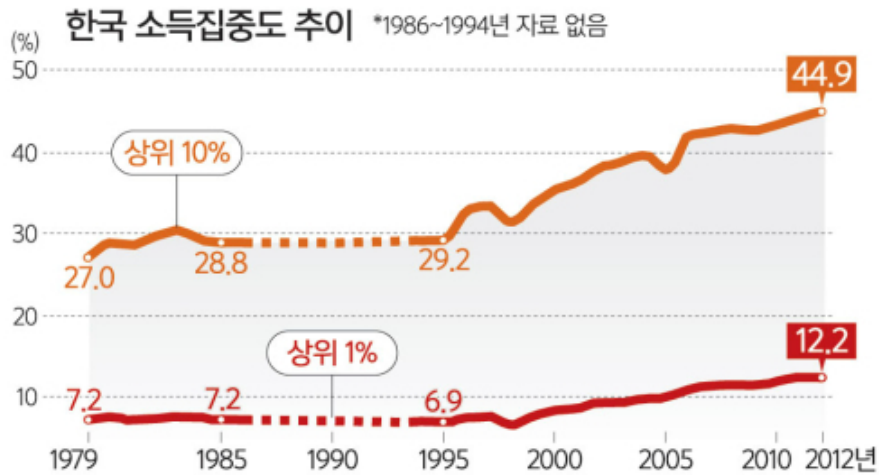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 민주당의 세 차례 집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화·확장되지 못한 채 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후퇴가 반복되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폭정으로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외교·안보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함
- 특히, 빈부격차와 그 대물림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상징되는 것처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공화주의에 대한 재조명

- ‘자유와 공공선’,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보장하고 육성하는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개념을 반영할 필요
- 직접민주주의의 적극적인 구현 의지도 담을 필요
- 이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과 함께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의 회복·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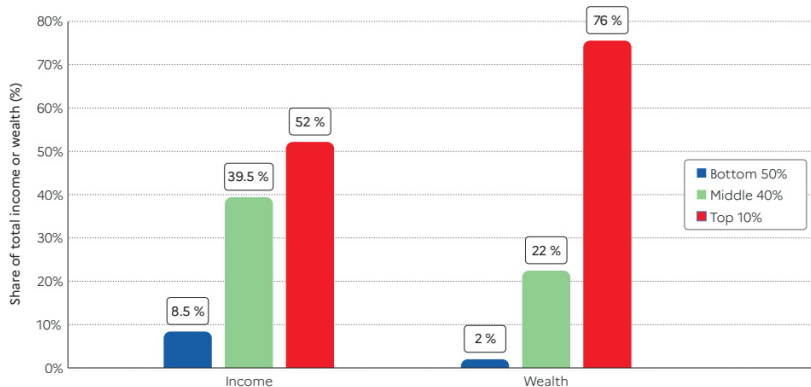
##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심화

-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도입을 기점으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심화 추세
  - 실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1985년까지 28.8% 수준이었지만, IMF 이후 급격히 늘어 2012년 기준 44.87%까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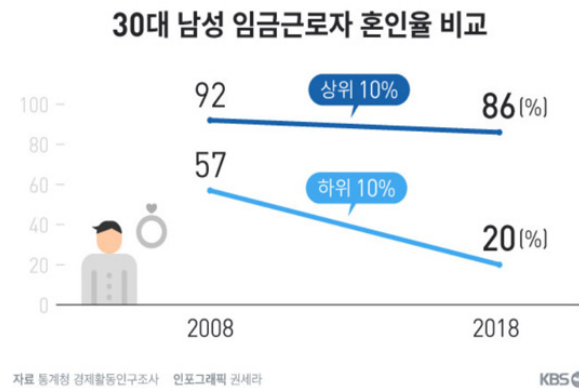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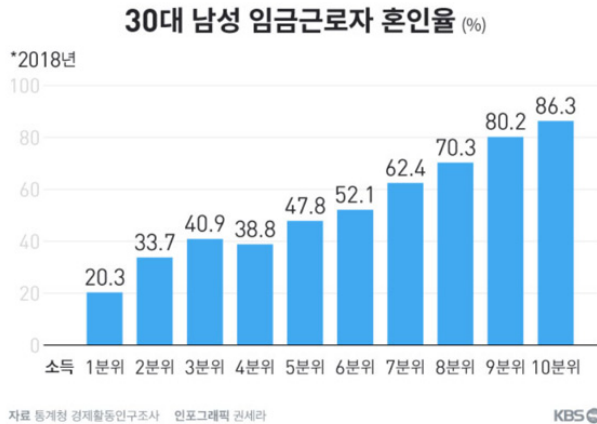
- 근로소득과 부동산자산 사이 불평등도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 1963년 대비 2007년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오른 반면, 노동자 실질소득은 15배 증가했으며, 따라서 대도시 땅값은 실질소득의 60배,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음
-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2021년 기준 전세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2%, 부의 76%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소득의 8.5%, 전체 부의 2%만을 소유하고 있음

**Figure 1** Global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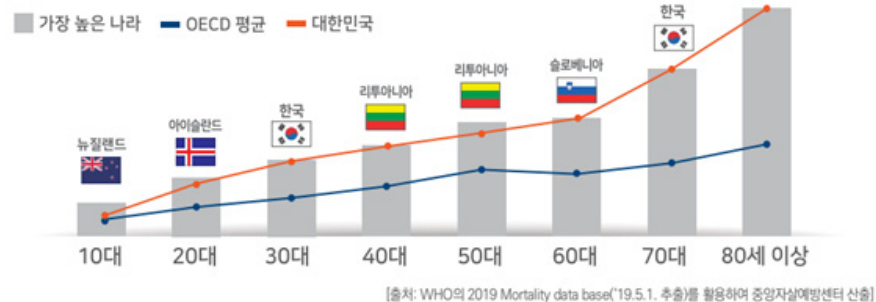


**Interpretation:** The global bottom 50% captures 8.5% of total income measured at Purchasing Power Parity (PPP). The global bottom 50% owns 2% of wealth (at Purchasing Power Parity). The global top 10% owns 76% of total Household wealth and captures 52% of total income in 2021. Note that top wealth holders are not necessarily top income holders. Incomes are measured after the operation of pension and unemployment systems and before taxes and transfers. **Sources and series:** wir2022.wid.world/methodology.

- 불평등 심화에 따른 자살률 상승, 출생률 저하 등이 구체적 사회문제 대두. 30대 남성 기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대비 혼인율이 높고, 그 격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추세. 반면에 30대와 70대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



## 30대, 70대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음



### ○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정책 강화

-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 왔음.
  - 저출생 고령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를 위한 세원기반 강화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IMF 외환위기 이후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 사업장)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플랫폼 사업장 등)의 이중구조로 나뉘어짐
  -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 등을 보장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강화 및 주거권 강화
  - 토지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및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환류
  - 공공주택 및 대안적 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권 보장
  -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 및 사회적 합의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가맹점주,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원

#### ○ 중산층의 축소와 불안정에 대해서도 주목

- 2021년 기준 한국 중위층의(50~90%) 소득비중은 37.5%, 부의 비중은 35.9%로 40%가 채 되지 않음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 1989년 갤럽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중산층이라 답했으나, 2010년대말 40%대로 떨어졌음. 한국사회학회 2013년 조사에선 체감 중산층은 불과 20%대
- 중산층 내부에서도 상층과 유사한 특권중산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중산층 내 중·하층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 □ 헌법 개정 추진

#### ○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해병 사망, 산재 사망 등 각종 대형사고와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 욕구가 매우 높은 만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

○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정책 시행의 의무 부여

○ 국회 우선의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강화

-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참여정치제도 도입

□ 윤석열정권에서 파생된 문제들

○ 권력 개념의 재정립 : 국민에 의하여 위임된 권력

-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은 모두 국민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명확화하고, 공적 권한을 사적 이해를 위해 행사하는 데 대한 단호한 배격

○ 법 앞의 평등 : 특권의 해체

○ 사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언론·미디어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 남북관계 악화와 동북아 신냉전구도 재현

□ 강령 조문 구조 및 분량의 제한 : 지향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압축하는 것은?

- 강령 분량이 21페이지에 달하고 협소한 의제까지 담아 대중 전달력에 한계
- 당원들의 자유로운 강령 토론과 정치적·정책적 상상력 발휘를 위해서도
- 동어반복 및 현재와 맞지 않는 표현들로 청년세대 이해도 및 접근성 제한
- 여타 제정당의 강령과 비교해서 분량 및 내용이 상대적으로 방대함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발제 2

# 시대정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지병근 조선대 교수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 시대정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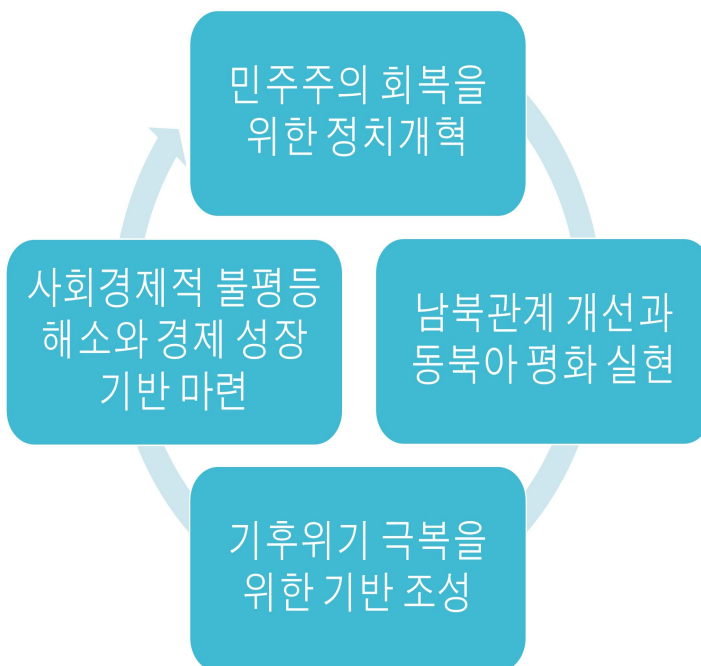
## 목차

- 2024년 민주당의 강령개정 배경, 시대적 과제
-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민주당의 강령개정 방향
- 정당체제와 이념적 위치 선정, 정치개혁의 내용
- 영국 노동당 사례 분석
  - 당규 IV. 목표와 가치, 당규 V. 프로그램
  - 2024 영국 총선(7.4.) 결과(제22대 총선 의석수 분포), 당원수 추이
  - 지역당조직 운영 사례(Battersea Labour Party)
  - 영국 노동당 당원 선서(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윤리규범)
  - 당원 인식 및 기초 조직의 한계
  - 영국노동당 모델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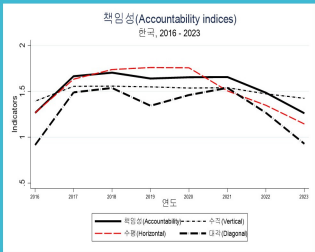
## 2024년 민주당의 강령 개정 배경

1. 2020년 강령 개정 이후 주요 사건
  - COVID19 확산(2020~2023)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운영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 남북한 관계 악화와 '힘에 의한 외교' 추진
  - 2024년 총선과 민주당 압승
  -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 시대적 과제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 기반 마련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실현
  - 기후위기 극복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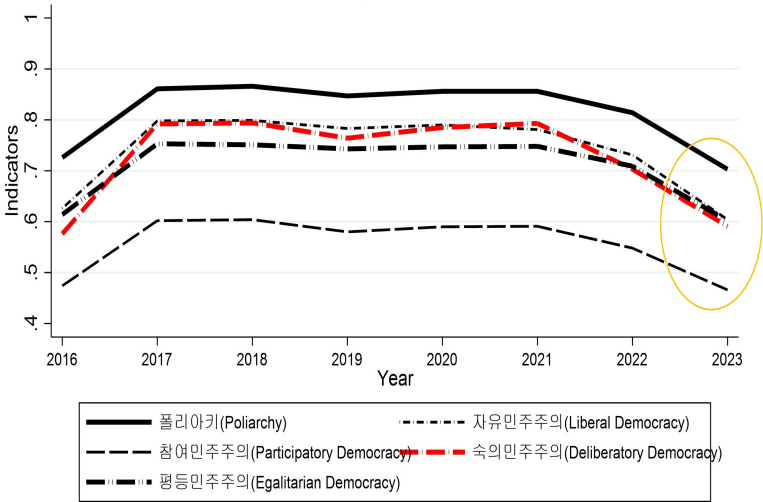
## 시대적 과제



## V-dem 민주주의 지수(2016~2023) V-dem(2024)



## 민주주의(Democracy Indices) 한국, 2016 - 2023



##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시대적 과제 해결의 지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강령 개정
-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등 5대 시대가치 계승
- 시민과 함께, 연대를 통해, 더 강한 민주주의[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질 제고]로

## 2024년 민주당의 강령 개정 방향Ⅰ

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 개혁
  - 민주주의 후퇴 예방
  -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수평 책임성, horizontal)
  - 시민/언론에 대한 책임성 강화(수직적/대각 책임성, vertical/diagonal)
  - 합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로 전환
  - 지방 분권 가속화
2. 실질적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 실현
  - 사회경제적 양극화 완화-정부의 책임성 강화
  -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적 양극화 완화
  - 기본 소득 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
  - 지역 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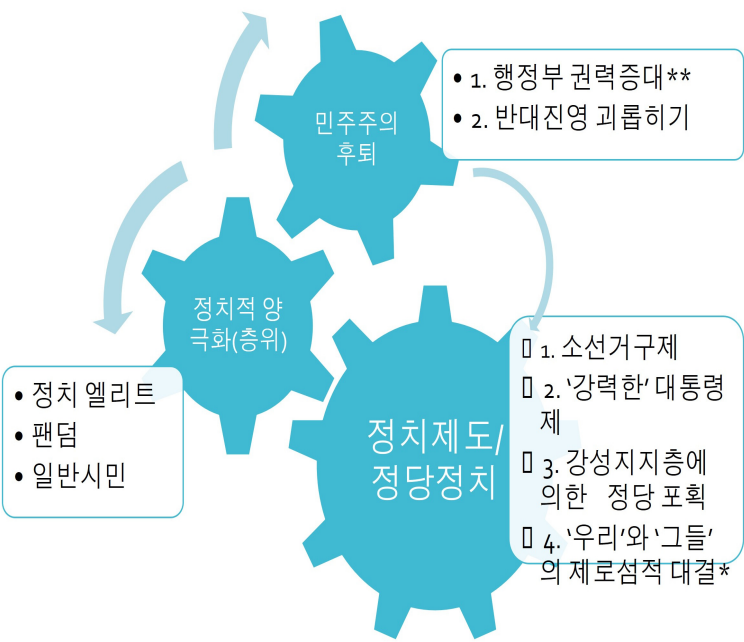
## 2024년 민주당의 강령 개정 방향Ⅱ

3. 정당 민주주의 강화: 참여와 숙의 요소 강화
  - 1) 참여 민주주의
    - 당원 주도 지역조직 정상화와 민주적 대의원 선출
    - 상향식 정책/공약 결정
  - 2) 숙의 민주주의
    - 정책 정당화
    - 정기적인 정책 포럼 개최와 공약 수정
    - 정당연구소의 자율성 및 정책 네트워킹 강화(정기적으로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정당 연구소가 여러 컨퍼런스 개최, 학계와의 공동연구 과제 추진과 시민교육 토대 마련)
4. 민주적 정치 문화 실현
  - 관용과 존중
  - 협력과 연대 의지 강화

2024년  
민주당의 강령  
개정 방향Ⅲ

5. 정치적 양극화 해소와 협치
- 필요성
    - 정치적 양극화(정서적/이념적)는 민주주의 후퇴 촉진
    - 대통령제 국가에서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시기의 교착 상태는 협치를 통해 해소 가능
  - 추진 방안
    - 형식적 협치가 아닌 실질적 협치를 위해서는 민주적 규범의 내면화와 함께 권력 분산,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를 합의제적 정치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음

한국 민주주의  
후퇴-조찬수·  
권혁용(2024)



\* 정당정치; \*\* 행정부 권력증대: 검찰/선거캠프 인사 활용, 시민의 기본권 제약, 시행령 정치(조찬수/권혁용 2024)

## 정당체제와 이념적 위치 선정

- 정당체제 관련 두가지 전략
  - 양당제 확립: 진보 정당 지지자 포용(중도 지지층 약화)
  - 다당제로 전환: 중도우파 유권자 외연확대+진보정당과의 연대
- 대통령제의 특성(후보자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다당제로의 전환(정치개혁)이 안정적 집권에 유리
  - 제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진보적 유권자의 지지 전환(정의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극우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거나 보수 진영의 분열 유발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추정됨
- 추진 전략: 진보정당(지지층) 포용과 협력체제 구축

## 정치개혁의 내용

### 정치개혁 관련 원내 정당들의 10대 공약(제22대 총선)

	민주당*	기타 정당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피의사실 공표 제한/수사절차법 제정(조국혁신당)	검사장 직선제(조국혁신당, 진보당)
		공수처 기능강화,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 및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전환’ (진보당)
		특수부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의무 법제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개혁신당)
정부구성	대통령 4년 중임제(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판검사 퇴직 후 선출직 공직에 대한 도전 제한(새로운미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녹색정의당)	대통령 권한 축소, 국무총리 임명제청권 실질화(개혁신당)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수당제한, 3선연임 금지, 백지신탁제 도입)(진보당)
	대통령의 재요구권/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요건 완화(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개정(새로운미래)
		국민법안발의권 도입, 국민투표발의권 도입(녹색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비율제고, 기호순번제 도입, 정당국고보조금제 개편(새로운미래)
		위성정당방지법, 선거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 연장(이상 개혁신당)
		특별법 발의요건 강화(개혁신당)

주: 괄호 안은 공약 제안 정당, \* 민주당 제안 공약의 경우 별도 표기하지 않음;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관련 공약 없음

## 영국 노동당 사례: 당규 IV. 목표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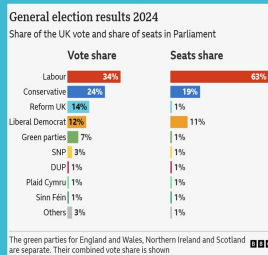
- 1.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는 혼자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는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단, 우리 모두에게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 권력, 부, 기회를 부여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가 우리가 수행하는 의무에 상응하며, 연대, 관용 및 존중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A. 공익을 위한 역동적 경제(A DYNAMIC ECONOMY)  
           B. 공정한 사회(A JUST SOCIETY):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에게 안전과 정의를 제공하여, 가족을 양육하고,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며 가난, 편견 및 권력 남용의 지배로부터 구제  
           C. 개방적 민주주의(AN OPEN DEMOCRACY)  
           D. 좋은 환경(A HEALTHY ENVIRONMENT)

## 영국 노동당 사례: 당규 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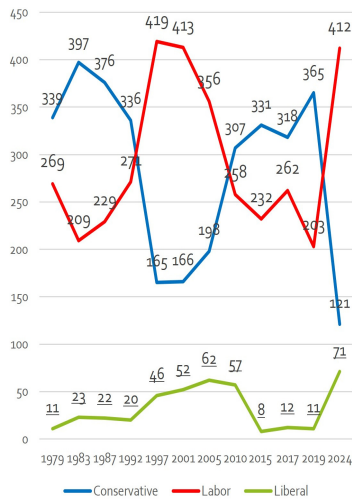
- 모든 단계에서 회원, 선출직 대표, 가입 기관 및 가능한 넓은 커뮤니티가 정책 심의 및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당대회는 시기별로 입법, 재정 또는 행정 개혁의 구체적인 제안이 정당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인지 결정(전국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이 전국에서 준비, 2/3 득표로 전당대회에서 채택)
  - 3~4항 생략
- 2024년 Manifesto 주요 슬로건: Restore hope, Stop the chaos, Turn the page, Rebuild our country, It's time for change



## 2024 영국 총선 (7.4.) 결과



### 하원의석수 변화 (1979~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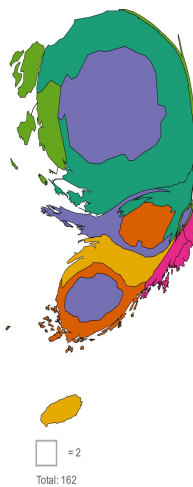


### 2024년 총선(20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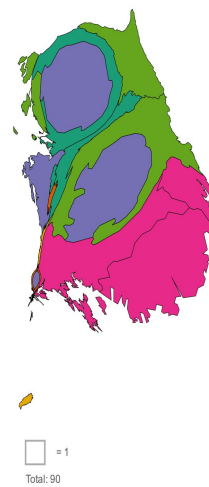
- 총의석 650석, 쟁점-경제(Brexit divide)
- 노동당의 압승, 보수당 참패(양당 간 득표율 차이는 10%, 의석비 차이는 44.8%p)
- 2019년 선거와 비교하여 노동당은 209석 증가, 보수당은 244석 감소(역대 최소 의석비)
- 반이민 보수정당 Reform UK(Nigel Farage 리더)가 14% 득표(3위); 180여 개 선거구에서 노동당과 보수당 후보 격차보다 많은 득표(NewYork Times. 2024.7.5)
- keir starmer: "democratic reckoning" "Don't forget what they have done!" he said. "Don't forget the lies! Don't forget the kickbacks." (Economist 2024.7.5.)

## 한국의 제22대 총선 의석수 분포 (지역구): 정당 내부 지역 대 표성

### 더불어민주당 (비호남성: 수도권 정당)



### 국민의힘 (비호남성: 영남정당)



<https://go-cart.io/cart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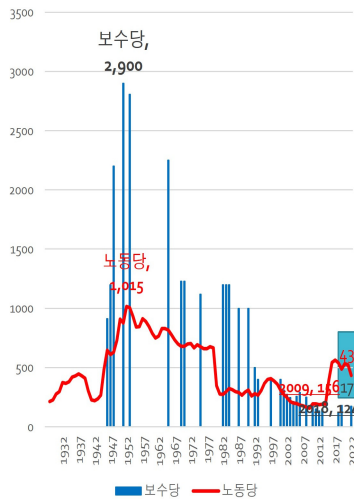
Gastner MT, Seguy V, More P. Fast low-biased algorithm for creating density-equalizing map projections. *Proc Natl Acad Sci USA* 115(10):E2156-E2164 (2018).

\* 민주당, 대구 경북을 0.5로 대체



## 당원수 추이

당원수 변화(1930-2022,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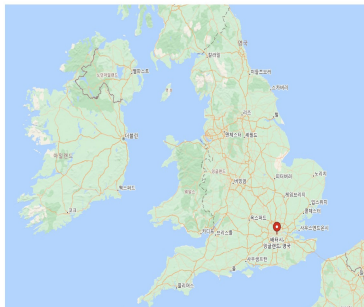


### 추이 평가

- '당파성 탈구(partisan dealignment)' 현상이 장기 지속: 일반 여론조사에서 정당일체감이 강한 이들의 비율 감소(Webb 1992)
- 당원수는 2009년(15.6만명) 이후 증가하여 2022년에는 43.2만명에 이룸(보수당은 2018년 이후 약간 증가하여 17.2만명)
- 가입노조는 5.5백만명~6.5백만명 내외로 큰 폭의 변화는 없음

## 지역당조직 운영 사례(Battersea Labour Party)

Battersea, southwest London, London Borough of Wandsworth, England



### 운영방식 I: 정기 회합과 운영진 구성, 권한

- Branch
  - 월 1회 회합
  - 연례전원회의(Annual General Meeting, AGM)에서 1인의 집행위원이 운영
  - CLP 대의원 선출(750명당 1인, 250명 당 추가 1인, 여성이 과반, 당직자 포함)
  - 지방의원 후보 선출(후보선출모임에서 투표, Candidate Selection Meeting)
- CLP
  - 월 1회 회합
  - 전체위원회(branch, 소속 노조, Socialist Societies가 투표, 일반당원도 참석 가능) 또는 전당대회
  - 연례전원회의(AGM)에서 CLP를 운영할 집행위원(의장, 비서, 캠페인 당직자, 청년 당직자, 여성 당대표)
  - 지역과 전국 당원대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과 포럼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영국 노동당 당원 선서

나는 노동당의 정신과 규칙에 따라 회원 및 비회원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행동할 것이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에 저항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노동당에 속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당 모임, 가정 방문, 캠페인, 소셜 미디어 또는 어떤 노동당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포용적으로 참여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 이성적인 논쟁을 진행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 노동당의 가치와 일치하는 건설적 비판을 하겠습니다.
- 항상 적절하고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겠습니다.
- 적절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도록 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따라 노동당 내에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건설적인 환경을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노동당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대에 관한 규정, 지침,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예의 없이 대한 경우** 노동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I pledge to act within the spirit and rules of the Labour Party in my conduct both on and offline, with members and non-members and I stand against all forms of abuse. I commit to treating all those I encounter with respect and courtesy whether or not they are in the Labour Party or a member of the public. Whilst I am at Labour Party meetings, on the doorstep, in a campaigning environment, on social media or in any Labour Party gathering, I will:

- Listen to others' viewpoints, participate inclusively, challenge appropriately.
- Conduct reasoned arguments and not talk over others.
- Use constructive criticism consistent with Labour's values.
- Always act in an appropriate and respectful manner to others.
- Take care to use appropriate, non-offensive language.
- Finally, I will not organize to drown out the views of others recognizing the unfairness this creates.

By following this Code, I will help to ensure an inclusive, safe and constructive environment within the Labour Party. I understand that if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Labour Party's codes of conduct, guidelines, policies and procedures on online and offline abuse, and if I fail to treat those I encounter with respect and courtesy, I will be subject to, and may be sanc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Labour Party.

## 더불어민주당 의 당원 윤리 규범

### 윤리규범(일부 선별)

-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당 소속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당직자(중앙당과 시·도당의 정무직과 사무직 당직자) 등 당원에게 적용된다.
-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품위유지) 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⑦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국가적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 행위, 유흥, 해외여행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성

- 제한된 적용: 적용대상이 일반 당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
- 추상적인 가치 제시: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 당원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 당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윤리규범 제4조)
- 모호한 윤리위반행위 규정: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 하는 언행,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 국가적 위기 또는 국가적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 행위, 유흥, 해외여행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제5조 품위유지)
- 당원 교육 의무 부재: 제15조(교육의무): ①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교육,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 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당원의 참여의무관련 윤리규정 부재

##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헌 제6조)

-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행 규정이 미흡: 피선거권에 대한 예외규정 부여, 정책결정을 위한 투표 요청권, 의안 제출 권한, 토론 요청 권리, 공직선거 후보 지원 의무, 윤리규범 준수 의무, 피교육훈련 의무, 당비 납부 의무 등
-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 등 실시

## 당원 인식 및 기초 조직의 한계

- 당원의 대상화
  - 당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당원 중심의 사고 미흡
  - 당원은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동원대상
- 당비 납부 이외에 정책 결정 및 선거운동 참여 등 활동관련 규정 부재
- 정당의 기초조직 부재
  - 공식적인 당기구를 통한 의결 참여 통로 부재 → 비공식적 통로를 활용한 향의
  - 온라인 게시판, 문자/전화 등을 이용한 사적 의견 표출

## 영국노동당 모델의 함의

- 강한 기초조직과 참여 민주주의
  - 민주적 정당으로 조직 재구성: 지역구별 지역 소모임 등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일상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당원의 온-오프라인 행동 규범 제정: 당원 선서
  - 트라이앵글(당원-대의원-당지도부)
- 당원이 만드는 정책정당과 숙의민주주의
  - NPF(2년 주기로 정책 형성) 경험 기반
  - 토니 블레어의 “Partnership in Power” (비판: 논쟁 형식화, 전문가 영향 강화와 일반 당원 소외, Clark 2018; Steer 2023)은 전당대회에서 정책 논쟁의 의미를 최소화

## 나오며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대는 단순한 불만의 표출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rzeworski, Adam. 2024. “Who Decides What Is Democratic?” *Journal of Democracy* 35 (3))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토론 1

김성환 국회의원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 토론 1

김성환 국회의원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토론 2

김영배 국회의원



## 토론 2

김영배 국회의원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토론 3

이연희 국회의원



## 토론 3

##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을 위한 민주당의 고민과 과제”

이연희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현재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민주당은 기후위기, 전환적 위기, 인구구조학적 저성장, 장기적인 침체에 맞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 AI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해야함. 현재의 강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1.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 해결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세제 개혁과 복지 정책을 강화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함.

- 2022년 통합소득자료 기준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소득은 1억 천만원, 하위 20%는 429만 원으로 25.6배에 달함.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자 지원 정책의 추진,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내용도 고려되어야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52’에 따르면,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42년부터는 한국의 인구가 4963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목표도 설정할 필요.

## 2. AI 시대 노동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

**AI 기술 발전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윤리기준 제정, 연구와 투자, 인력 양성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기술에 발전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함.

- 23.10 바이든 행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23.3 세계 최초 EU에서 AI 법(AI 기술 분류 및 콘텐츠 식별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

**노동시장 변화 대응:**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금융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00여 명의 인원감축을 발표했으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드롭박스도 AI를 사유로 인력의 16%인 500여 명을 감원함.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미 58개의 기업이 약 7800여 명을 감원한 상황.
- 전문가들은 AI기술개발 투자가나 AI대체효과로 인한 감원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3. 남북관계 문제 해결

**다자구도 속 남북관계 개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구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에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기.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민주당은 대전환의 위기 속 산업전환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방안과 목표가 강령으로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이 미래지향적인 수권정당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당원과 국민에게 줄 수 있을 것임.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1차 시대정신,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